

철강업계, 中 반덤핑 제소 본격화... 정부 대응방향 이목집중

도금·컬러강판 등 반덤핑 제소 확산
보호무역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
中 보복 가능성... 정부 역할 중요



동국씨엠 부산공장.

/동국씨엠

국내 철강사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속속 나서면서 무역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제철이 수입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선 데 이어 최근 동국씨엠도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추진했다. 이에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오는 4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통상예비 조사 기간이 3개월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

는 6월 중 예비 판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저가 도금·컬러강판의 수입량은 266만7101톤으로 국내 연간 평균 수요인 261만7771톤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 76만4053톤이었던 중국산 수입량은 지난해 102만1617톤

으로 33.7%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 유통량 대비 중국산 점유율은 28.1%에서 40.8%로 12.7%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제품은 국산보다 10~15%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도금량이 건축법 규정인 m2당 90g에 한참 못 미치는 m2당 60g 수준임에도 대

량 유통되고 있어 품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철강업계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내비쳐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이 철강제품을 비롯해 다른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지연하거나 품질 검사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반덤핑 관세 절차가 개시되면 중국 업체들의 우회 수출 경로가 확대돼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도 중국은 무역 분쟁 속에서 보복 관세로 대응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미국

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했다. 미국산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에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 무역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과 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반덤핑 조치에 반발해 무역 압박을 가할 수 있으나, 이는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 통상 문제”라며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美·中 갈등에 드론시장 균열... 韓, 글로벌 수출 '청신호'

안보 우려 확산... 中 드론 배제
韓 기업들 해외시장 개척 구슬땀

중국 드론 기업 'DJI'가 장악해온 글로벌 드론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보안 우려로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확대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드론 산업 수출액은 232억원으로, 전년(144억원) 대비 62% 증가했다. 수출국도 미국, 캐나다 중심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동남아·중동지역에서는 스마트시티 및 물류·보안 드론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드론 수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지만, 꾸준한 기술 개발과 도전정신

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DJI의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도 DJI의 점유율은 58%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데이터 보안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 규제를 검토 중이며, 미국 하원은 지난해 9월 DJI의 신규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대형 방산업체들은 미국과 협력해 군사용 드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에이릭스, 파블로항공, 니어스랩 같은 중소기업들도 자체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이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드론쇼코리아(DSK 2025)'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주목받았다. DSK 2025는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로, 지난달 26~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드론 엔터테인먼트 기업 '유비파이'는 군집 비행 기술을 기반으로 지난해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 1000만달러(약 143억원) 이상 수출하며 국내 드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50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산업용 드론 분야에서는 니어스랩이 두각을 나타냈다. 니어스랩은 자율비행이 가능한 무인화 드론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불법 드론 탐지·차단 기술을 적용한 '안티드론' 설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무인화 드론스테이션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

정받았다.

다만 국내 드론 산업은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여전히 중국과 격차가 크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드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행 안전성 검증 ▲민간시장 확대 ▲대형 드론 제조업체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용 드론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국가안보와 방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당분간 방산업체가 군사용 드론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경찰·공격용 드론뿐만 아니라 부품·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업 전반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

국내기업 10곳 중 8곳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국내 제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자가발전,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구매 등 한전 전기가 아닌 새로운 전력조달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요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방안을 시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1.7%, '지금은 아니나 요금이 더 오르면 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7.7%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경우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SMP(전력시장가격)로 전기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추이를 보면 지난 2000년 이후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19차례)로 올라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해서 역전현상이 더 커졌다.

기업들의 '탈(脫)한전'이 본격화된 경우 한전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 영향이 전력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78.7%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고, 그 중 46.4% 기업은 '경영상태에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SK온-SK엔무브, 전기차용 차세대 액침냉각 기술 뿔낸다

인터배터리 2025
무선 BMS 접목... 액침냉각 극대화

SK온과 SK엔무브가 배터리 안전성 및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차용 '액침냉각' 기술을 공동으로 선보인다.

SK온은 오는 5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액침냉각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라고 3일 밝혔다.

액침냉각은 절연성 냉각 플루이드를 배터리 팩 내부에 순환시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시스템이다. 냉매가 배터리 셀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공랭식, 수랭식 등 간접 냉각 방식보다는 온

도 상승을 더욱 효율적으로 억제한다. 급속충전 등 발열이 심한 상황에서 배터리 셀 온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 열 폭주 발생을 방지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양사가 개발 중인 액침냉각 배터리 팩은 냉각 플루이드와 셀의 접촉 면적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유로 설계로 냉각 효율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화재 시 플루이드가 원활히 공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열 확산 방지 성능 역시 높였다.

SK온은 독자적 무선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를 접목해 액침냉각의 성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BMS는 셀의 배터리 정보를 한

데 모으기 위해 금속 케이블과 커넥터 등을 사용했다. 때문에 배터리팩 구조가 복잡해지고, 공간 효율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액침냉각을 도입할 경우, 케이블이 냉각 플루이드의 흐름을 방해해 냉각 성능을 저해하는 부분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SK온은 배터리 셀 탭에 무선 칩을 직접 부착하고, 해당 칩이 수집한 정보를 모듈의 안테나가 BMS에 전송하는 구조를 고안했다. SK온 무선 BMS가 적용된 액침냉각 모듈 내부에는 별도 케이블이 없어 냉각 플루이드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 단순한 구조와 우수한 물리적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플루이드의 잠재적 누출 위험이 줄어들고, 방수 성



SK온 '인터배터리 2025' 부스 조감도. /SK온

능 역시 향상된다.

SK엔무브는 액침냉각 솔루션 별 최적화된 냉각 플루이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3년 SK텔레콤과 협력해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SK엔무브 냉각 플루이드를 적용하고 실증평가를 진행한 결과, 공랭식 대비 총 전력 소비를 37%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차현정 기자